

현장시선



송규진 제주YMCA 사무총장

우도의 안전, 규제 공백을 메우는 결단이 필요하다

제주 본섬에서 배로 15분, 에메랄드 빛 바다와 유채꽃이 어우러진 우도는 연간 15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명소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늘 '교통혼잡'과 '안전사고'라는 고질적인 숙제가 따라다닌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우도면 내 자동차 운행제한 연장 명령'은 이러한 숙제를 풀기 위한 고심어린 결단으로 읽힌다.

차량, 그리고 내연기관 이륜차의 우도 내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단순히 이동 수단을 줄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범람의 사각지대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난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간 우도는 이른바 '규제 공백'의 전장이었다. 지난해 8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의 운행 제한을 완화하자, 일부 업체들은 이를 악용했다. 안전 인증조차 받지 않은 미등록 전동카트를 들여오고,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시속 25km 이하의 저속 이륜차를 대거 투입해 영업에 활용했다. 규제의 취지는 무색해졌고, 좁은 우도의 도로로 정체불명의 탈것들로 가득 찼다.
결과는 참혹했다. 지난해 11월, 렌터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1명

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며 우도의 교통안전은 한계치에 도달했음을 증명했다.
사고 직후 렌터카 운영을 다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제주도는 고심 끝에 '선별적 허용'과 '철저한 관리'라는 중도안을 택했다. 지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전세버스와 전기차는 유지하되, 사고 위험이 크고 관리가 어려운 무등록 기기들은 도려내기로 한 것이다.
물론 이번 조치에 대해 관련 업계의 반발이나 관광객의 불편함이 제기될 수 있다. 편리한 이동권은 관광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번호판도 없고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전동카트가 골목길을 누비는 상황에서, 관광객의 생명과 주민의 일상을 담보로 한 경제

활성화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이제 공은 집행과 단속으로 넘어왔다. 제주도는 오는 19일부터 유관 기관 합동 단속을 예고했다. 단순한 계도를 넘어, 불법 운행 기기를 뿌리 뽑는 단호한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 동시에 우도 내부의 교통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렌터카와 전세버스가 허용된 만큼, 보행자와 차량이 섞이지 않는 동선 분리와 안전 시설물 확충이 병행돼야 이번 명령의 진정성이 빛을 발할 것이다.
우도는 제주 관광의 자부심이다. 이번 운행제한 변경이 규제 완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우도'라는 브랜드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각지대의 무등록 차량을 걷어낸 자리에 관광객의 웃음소리와 주민의 안녕이 안전하게 자리 잡길 바란다.

사설

공익직불금 환수 조치는 탁상행정의 표본

농업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 중 하나는 공익직불금 신청이다.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이 제도는 자격 요건만 갖추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 농업인들이 이미 받은 공익직불금 5년치를 환수당할 처지에 놓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제주도는 최근 공익직불금이 이미 지급된 254필지 소유 농업인들에게 5600여만 원의 환수 조치 통보를 했다. 환수 조치는 업무착오에 의해 공익직불금이 잘못 지급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 결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 폐기물의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 등 불모지 관리, 농업인 이수 등 총 16가지의 준수사항을 반대로 따른 후속조치다. 제주도는 부당지급 사례를 조사해 이의신청 등을 받은 후 환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

부 농가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거쳐 직불금을 신청했을 뿐인데 5년치를 통째로 환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서류 확인 절차 소홀이 초래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공익직불금 5년치 환수 조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직불금 자격조건이나 지급 대상 여부는 해당 공무원들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과 현장 점검을 거쳐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다. 서류 확인 절차가 소홀했거나 현장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영농 폐기물의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 등 보관, 농업인 교육 이수 등 총 16가지의 준수사항을 반대로 따른 후속조치다. 제주도는 부당지급 사례를 조사해 이의신청 등을 받은 후 환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

그래픽 뉴스

상설특검 수사 결과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총 65명), 2025년 11월 16일 임명 뒤 90일간의 수사 결과 발표
\* 세월호 이후 두번째 상설특검이자 검찰 내부 겨냥 첫 특검 수사
쿠방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
수사 대상: 쿠방플랫폼서비스(CFS) 임성환 전 대표이사, 정중철 현 대표이사, 법인
수사 결과: 기소
수사 내용: 2022년 11월~2024년 4월까지 CFS에서 퇴직한 임성환 전 대표이사 40여명의 퇴직금 총 1억 2,500만 원 상당을 퇴직 이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
관방권 미지급 의혹 사건
최재현·박건욱·이희동 검사, 김정민·남경민 수사관
이첨
형사처벌 대상 아닌 업무상 과오 결론. 검찰 징계 등 제도 개선 요청 예정

열린마당

'상사 모시는 날' 근절, 목민심사에서 길을 찾다



장수민 제주서부경찰서 한림파출소

최근 공직사회와 여러 조직 내에서 이른바 '상사(간부) 모시기 문화'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다. '상사 모시는 날'이란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을 말한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200여 년 전 다산 정약옹이 설교한 목민심사의 가르침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다산이 강조한 청렴은 단순히 금전을 탐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검소하며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으뜸이라고 했다. 또한 상사를 모시는

것이 예의로 포장될 수는 있으나 진정한 예의는 업무의 엄정함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상사 모시는 날이 비록 오랜 관행이라고 치부되지만 국민의 눈에는 공직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적폐로 비칠 뿐이다.
우리 경찰에서도 상사가 식사비를 지불하거나 각자 내기(더치페이)를 하더라도 식사 순번을 정하거나 비자발적인 식사를 하게 된 경우까지 상사 모시는 날에 해당한다고 넓게 해석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 신고체계 운영,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 인식 전환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등 다각적 자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산의 목민심사는 200여 년 전 조선의 관료들을 위해 쓰여졌지만, 그 가르침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공직사회에서도 강력한 울림을 주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K-공직윤리'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폐감굴·나무 무단투기, 근원적 대책 고민해야

며칠 전 농민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신의 밭에 잘린 나무들이 무더기로 버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양이 작아 행정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몇 차례에 걸쳐 인근 폐기물처리센터로 옮겨야 했다. B씨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 누군가가 몰래 버린 폐나무와 썩은 감굴을 직접 처리해야 했다.
있을만하면 폐감굴·나무 무단투기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곤 한다. 감굴 수확 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해에는 더욱 빈번해진다. 무단투기된 폐감굴·나무는 미관을 해칠뿐 더러 악취가 심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외진 곳에 버려지다 보니 처리도 쉽지 않다. 폐감굴에서 나오는 폐수는 지하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래저래 걱정이 깊다.
불모지였던 코스타리카의 한 열대 우림이 건강한 숲으로 되

살아 났다고 한다. 한 연구팀이 오랜지 껍질을 버린 후 16년 만에 확인한 결과다. 숲의 총 생물량은 176% 증가했다. 불모지는 푸릇푸릇 울창한 숲으로 변모했다. 오렌지 껍질 덕분이었다. 얼마 전엔 국내의 한 연구진이 폐감굴로 토양보호제·개량제 등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사업화에 나서기도 했다.
폐감굴·나무 등의 무단투기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출구가 없는 원천 봉쇄만이 능사는 아니다. 화재로 피해를 입은 야초지에 도포하거나 산업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관련된 연구와 함께 법률 개정,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자연을 보호하면서 농민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근원적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라일보
제주 대표 신문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ih@ihalla.com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상속한정승인 공고
피상속인: 망 이윤진(1968. 04. 09. 생)
최후주소: 제주시 과원로 27, 303동 401호
(노형동, 부영아파트)
상속자는 2025년 12월 28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은 2026년 2월 20일 제주지방법원 2025년단602호로 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신고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고처: 제주시 다령로7길 18, 601호 (노형동, 삼다빌라트)
2026. 3. 6.
공고인(특별상속한정승인자) 장서현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도택배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특성산업진흥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율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설 (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상속한정승인 공고
피상속인: 망 허의성(1963. 01. 17. 생)
최후주소: 제주시 애월읍 하귀로 55-2 (애월읍)
상속자는 2025년 12월 12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은 2026년 03월 03일 제주지방법원 2026년단5033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신고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고처: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606, 102호 (대포동)
2026. 3. 6.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허정일, 허정만, 문중숙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작명☆택일☆사주☆운세☆상담
-운명과 삶의 흐름을 명쾌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사주와 맞는 좋은 이름을 작명해 드립니다.
사주 명리학 수강생 모집
은퇴 없는 평생직장 역학상담사
1.역학상담사 자격증반 2.철학원 창업반(통변중심)
\*개인교습으로 수시모집
☎ 연락처 동방철학원 064)759-4585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도지부장 문학림